

日本은 戦争보상하라

8.15 46돌... 民間被害단체 잇다訴訟



◇지난 6일 히로시마(廣島)에서 열렸던 한국인 原爆피해자 위령제. 일본은 태평양전쟁당시의 침략과 전쟁책임은 인정하지 않은채 자신들이 유일한 원폭피해자라고 강조하고있다. 【統一日報제공】

1991. 8. 15 한국 <下> 113

술 그런 의심을 사기에 간에 큰 단락을 일으키고 있다. 65년 한일협정시 맺었던 청구권조약에 대해 일 본측은 「국가와 「민간인」의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했 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」고 밝혔다. 그러나 당시 東京大의 와다(和田春樹) 교수 등 일본 지식인들은 지 해자에게 그 죄를 갚아주는 것」이라고 정의하고 「두번 다시 침략이나 국공주의의 길을 걷지않고」라고 노골해 야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신 뢰를 얻을수 있다」고 주장

한 그런 의심을 사기에 간에 큰 단락을 일으키고 있다. 65년 한일협정시 맺었던 청구권조약에 대해 일 본측은 「국가와 「민간인」의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했 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」고 밝혔다. 그러나 당시 東京大의 와다(和田春樹) 교수 등 일본 지식인들은 지 해자에게 그 죄를 갚아주는 것」이라고 정의하고 「두번 다시 침략이나 국공주의의 길을 걷지않고」라고 노골해 야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신 뢰를 얻을수 있다」고 주장

日、協定·國籍내세워 보상외면

經協차관으로 "끝": 원호법도 自國人에만 적용

「韓·日협정」개인請求權 포기한것 아니다 "새겨야

구에 북부부담으로 일관한 안고공인한것이 일본정부 것은 분명한 반대의사이다. 일본정부가 傳家の 實力 령한다는 이유로 자위대 掃 査를 즐겨쓰는 『조약과 海艦을 페르시아灣에 보내 정예의해 보상의무가 소멸 됐다』는 논리는 국제법상 고, 캄보디아에 자위대 掃 査를 보내고선 안된다」고 문제의 여지가 있어 당시 국

日청구권을 포기한것은 사 실이다. 그러나 포기한것은 국가의 청구권이 아닌 민간의 청구권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다」고 말한다. 당시 청와대수석비서관이 었던 閔忠植씨도 최근 일본 2차대전당시 국가운대 전 후 처리에 가장 무성의한 나 라가 일본이라는 은세상이 다 안다. 독일이 분단시대에 이 미 30여개 가해국에 정부차